

# 기억되는 과거의 과잉(過剩): 국제정치의 시간성(temporality)과 반일정체성의 장기지속(longue durée) 및 위안부 문제\*

손기영\*\*

##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과거의 과잉        |
| II. 국제정치의 시간성(temporality)        | V. 반일 정체성과 위안부 문제 |
| III. 장기지속(longue durée)과 반일<br>감정 | VI. 결론            |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공간성(spatiality)에 치중된 국제정치학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국제관계의 시간성(temporality)에 관한 연구이다. 시간성과 관련해 철학적, 역사적으로 축적된 연구와 최근 국제정치학계의 동향을 바탕으로 시간성을 국제관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한다. 이 논의를 심화시킬 목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국가정체성의 일부로 구조화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일본에 대한 반감과 대결의식을 유발하는 반일감정에 대해 분석한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반일감정을 시간적, 철학적, 정량적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반일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시간성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과잉’ 현상을 보이는 한국의 국가정체성 문제를 조망한다. 국가의 시간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프랑스 아날학파(Annales School)의 페르낭 브로델(1977)이 제시한 ‘장기지속(longue durée)’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A00001).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교수.

• 주제어: 시간성, 국제관계론, 반일감정, 국가정체성, 위안부

## I. 서론

본고는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할 국제관계의 시간성(temporality)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탐색이다. 이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제관계의 시간성과 관련된 국가정체성의 충돌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Kowert 1998/9). 국가 간 협력과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양국 간의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기억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화해를 통한 협력 과정을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문제가 협력의 증진을 위해 현재진행 중인 노력을 중단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설계조차도 차단시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협력과 통합에 관한 논의의 전개를 막는 요소들 중에 두드러진 것은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이다(김유은 2004; 이신화 2006).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적이라고 판단하면서 편승(bandwagoning)전략을 취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 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 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물론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2015년 12월의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와 같이 그 결과물은 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가 2017년 5월 12일 퍼낸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15년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로 훼손된 한일 양국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연합뉴스』 2017/05/

12), 이런 점에서 새 정부는 과거사의 해결과 미래의 한일협력 강화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킬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한일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차기 연구과제로 설정하면서 시간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반일정체성을 분석하고 반일감정의 구조적 견고성과 그 견고성을 유지시켜 주는 주류 담론의 문제점을 조망함으로써 차후 진전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정치의 시간성과 ‘기억의 정치’에 대해 분석한 다양한 문헌 자료를 살펴보면서 본고가 취할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과거의 과잉’이라는 논지를 설명하기 위해 양적, 질적 분석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다. 양적 분석 방법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할 것이고, 질적 방법으로는 국가의 시간적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프랑스 아날학파(Annales School)의 페르낭 브로델(1977)이 제시한 ‘장기지속(longue durée)’을 포함한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조화의 필요성을 논의할 것이다(Sartre 1956). 마지막으로 관련 사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반일감정의 구조적 성격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 II. 국제정치의 시간성(temporality)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피력하고 있고, 일본은 아베(安倍 2006) 총리가 자신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美しい國へ)』에서 밝혔듯이 경제적 능력에 맞는 군사력의 확대를 통한 ‘보통국가’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미래에 어떤 국가 혹은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갖고 현실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중견국가 혹은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이라는 화두가 등장했었지만 일본과는 위안부와 독도를 둘러싼 과거사와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중국과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충돌이 진행되면서 추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중국과 일본은 국가의 시간적 정체성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배분과 조화를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나치게 과거 편향적이거나 뚜렷한 미래 목표를 설정하지 않

고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시간성에 관한 철학적, 역사적 논의를 점검해 보고 국제정치학이 보는 시간성에 대한 최근 논의도 분석해 본다.

알렉산더 웬트(Wendt 2004)는 국가에게 이성, 정체성, 이익, 신념 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를 인격화시키는 일반적인 경향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중요함을 환기시킨다. 물론 국가가 인간의 집합체로서 인격과 유사한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국가와 인간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현대과학의 수준으로는 인간의 수명을 무한하게 연장할 수 없지만, 국가의 수명은 수천 년은 아니더라도 수백 년은 연장될 수 있다. 일반적인 인간의 일생에서 소년은 보통 미래를 꿈꾸며, 청년은 현실에 충실하고, 노년은 과거를 반추하게 된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국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경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연구는 국가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시각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흔히 국가에 대한 연구는 한정된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이유로 공간성(spatiality)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시간성(temporality)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Agathangelou & Kilian 2016; Hom et al. 2016; Dalsgaard 2013; Hutchings 2008; Hassan 2010). 제프리 체클(Checkel 1998)이 명명한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적 전환(constructivist turn)’처럼 사회과학에서 전지구화(globalization)나 인터넷 사용의 확대와 관련해 ‘시간적 전환(temporal turn)’을 논의하는 학자들이 생겨났다(Hassan 2010). 국제정치이론에서 시간성이란 개념은 냉전과 같이 시간적으로 멈춰진 것 같은 시대가 종식되고, 세계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맞아 탈구조주의 학자들이 주류이론의 합리주의적 접근법에 대해 ‘망명자’ 혹은 ‘반체제 인사’의 언어와 시각에서 정당화된 구조와 행위, 기억, 담론과 의미의 형성 과정 등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등장했다(Ashley & Walker 1990, 259). 르네 한센(Hansen 2006, 43)은 탈구조주의적 담론 분석법을 어떻게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면서, 개발, 변화, 지속, 정체 등의 주제들이 외교 정책 관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려 했다. 샬롯 엡

스타인(Epstein 2008)도 담론 분석 기법을 이용해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강력한 포경 반대(anti-whaling) 담론의 형성이 어떻게 고래를 보호해야 될 포유류로 변신하게 했는지를 분석한다.

하지만 서구 중심적 지식의 편향성과 패권적 질서에 저항하면서 탈식민 주의적 담론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았는데(Said 1993), 국제정치이론 분야에서도 서구 중심적 혹은 근대적 시각의 우월적 지위는 바뀌지 않았다(Hom 2010). 특히 서구와 제3세계를 보는 시각은 추상적인 이분법적 구조로 고착화되었는데, “개발/저개발, 제1세계/제3세계, 중심/주변, 도시/위성, 선진개발국/저개발국, 근대/전통, 실제국가/유사국가”가 그것이다(Doty 1996, 2). 이러한 이분법적 담론구조에서는 제3세계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직 현재라는 시간성을 향유하지 못하는 ‘원시적 공간’으로 표상되었다(Doty 1996, 51).

국제정치의 시간성은 한편으로 9/11과 같은 전대미문의 테러가 현대의 시간에 대한 감각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에 대한 고찰로도 이어진다. 즉 서구의 중심에 대한 테러 공격은 국제정치의 일반적인 시간성을 훼손하면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든지, 혹은 위협의 과장과 안보 문제화(securitization)를 통해 냉전적 사고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쪽으로 귀결되기도 했다(Campbell 2002). 또한 시간성은 정체성의 변화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웬트(Wendt 1999)는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사회심리학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과 재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웬트의 구성주의에 비판적인 마자 제퍼스(Zhufuss 2001)와 같은 구성주의자들은 웬트와 같은 구조주의적 구성주의자들은 평화주의와 군사적 개입의 필요성과 같이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독일의 변화하는 국가정체성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드리히 크라토크빌(Kratochwil 2006)도 기억에 대한 관심을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연계시키면서, 과거는 고정된 데이터의 창고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 및 정책의 선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주장했다.

국제정치학에서 시간성은 많이 연구된 분야가 아니지만, 크라토크빌이 언급한 시간성과 관계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 분야는 다채로

은 연구업적이 축적되고 있다(Hirsch 1995; Brewer 1986; Connerton 1989; Milgram 1974). 기억의 정치를 설명할 때 집단기억과 그것이 형성한 사회 구조가 흔히 논의의 주제가 된다. 보통 특정 사건으로 인해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적의가 후세에 전달되면서 학살, 전쟁, 혹은 가혹 행위가 재발되는 원인이 되는데, 많은 경우 복잡한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사건에 초점을 맞출 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Hirsch 1995, 3). 더구나 개인적 기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개인적 기억과 소속 집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사실적인 기억으로 재구성되기도 한다(Brewer 1986, 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승된 집단기억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담론은 국가의 정책으로 입안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 형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현재의 사회적 질서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Connerton 1989, 3; Edkins 2003).

문제는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신의 과거를 편향된 쪽으로 해석하면서, 인간의 잔혹성에 대해 축적된 기억이 새로운 잔혹 행위를 막는 데 별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Hirsch 1995, 10-11). 여기에는 과학적 엄밀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사회과학도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미 형성된 민족국가 단위로 “충성, 규율, 자기희생의 미덕”을 강요함으로써 좋은 군인이나 시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타국과의 관계에서는 전쟁과 대량살육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Milgram 1974, 188). 특히 신자유주의나 안보와 관련된 사회과학의 역할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사회과학이 과거에 바탕을 두고 현재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동을 설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산실이어야 한다(Hirsch 1995, 72; Agathangelou & Killian 2016).

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사이드(Said 1979)는 현재를 해석하기 위해 과거를 참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사이드(Said 1993, 3)는 과거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혹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지, 이러한 과거가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선택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부분에서 시간성, 기억,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철학적 시각에서 진행해 보자. 장 폴 사르트르(Sartre 1956)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1940년 독일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되어 파리에서 저항 운동을 하는 중 1943년에 『존재와 무』를 출판하면서 철학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한다. 이 책에서 사르트르는 음식점의 웨이터 혹은 대학의 교수라는 직업처럼 불가피하게 취득된 현실의 자기정체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주체적 자아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 현상을 ‘자기기만(mauvaise foi, 영어로는 bad faith)’이라고 명명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자기기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 있는 ‘무(nothingness)’를 인지할 때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보았다.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은 사르트르(Sartre 1956, 169)가 보는 시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드러나는데,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에 의해 규정되지만, 사망 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르트르(Sartre 1956, 179)에 따르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의 흐름(flight)의 형태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할 뿐이다.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재가 아니라 부족(lack)이라는 상태로 설명되는데, 사르트르(Sartre 1956, 183; 186)에 따르면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미래에 또 다른 육체적, 감정적, 사회적 지위를 획득해서 문제적(problematic) 현재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사르트르(Sartre 1956, 185)는 미래만이 나의 현재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현재를 부정하면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 형성된 정체성에 자신을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탈식민주의로 확장하면, 사회의 주류 세력이나 국가에 의해 ‘공간화’되어 버린 단선적(linear)인 시간의 중단을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를 역설하는 학자들이 있다(Agathangelou & Killian 2016, 13-14). 시간성을 공간화 시킨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했던 여러 우연성과 우발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재를 보편적인 공간적, 혹은 영토적 현상으로 고착화시키는 경향인데, 예를 들어 세계사를 작성할 때 제국주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외의 많은 사실들이 일반화되거나 말살되는 현상이다(Shapiro 2001, 113).

에마뉘엘 레비나스(Levinas 1969, 56)는 “기억은 불가능한 것을 실현시

킨다. 어떤 사건 이후 기억은 과거를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주인노릇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기억은 과거를 전체적으로 재생할 수 없으며 파편적이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나머지 불편한 사실들은 무장해제 시킨다(Nishimura 2011, 101). 레비나스의 철학은 서양철학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성(totality)의 철학에 반대하면서 환원될 수 없는 ‘자아’와 ‘타자’의 자율성을 통해 ‘타자’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혹은 ‘향유’의 대상에 남겨두는 것이다(Levinas 1969, 120). 이런 입장에서 레비나스는 타자는 자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타자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the Other)’을 발전시켰다. 시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레비나스는 “시간은 불연속적(discontinuous)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기억은 단지 역사적으로 끝난 사실을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존재에는 연속성이 없고 과거는 새로운 회상을 통해 변형된다고 보았다(Levinas 1969, 284).

이상의 논의에서 주목할 것은 선택적 기억을 바탕으로 형성된 담론과 이 담론을 통해 형성된 인식구조가 사회적으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국가정체성의 표상이 되고, 이렇게 고착화된 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발전과 국가관계의 개선을 막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실의 국익에 초점을 맞추는 실증주의적 국제정치학이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구성주의적 접근법이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접근법 역시 설명력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시간성, 정체성, 담론, 기억 등의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탈구조주의적 시각에서 시간성과 정체성을 다루면서 환원될 수 없는 자아와 타자의 자율성을 강조한 레비나스적 정체성에 주목할 것이다.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내선일체’를 추구한 것이나 한국이 한국인의 기대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사과와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모두 타자의 자율성을 속박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보통 과거에 대한 기억도 타자의 자율성을 속박하는 방향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레비나스(Levinas 1969, 56)는 단편적인 기억은 타자를 무력화시키려는 ‘폭력’이라고 정의했

다. 물론 협력의 단계에서는 자아와 타자가 어떻게 대화하고 인정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되겠지만(Hegel 1977; Rouch 1983; Ricoeur 2005), 이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다.

종합하면 본고에서 역사성(historicity)을 넘어서 시간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정체성을 분석할 때 시간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균형적으로 국가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기억의 정치와 주류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유도 각각의 접근법이 과거 혹은 현재에 편향적인 서술과 분석에 충실해 미래설계를 포함한 중장기적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조망하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과잉이라는 논지가 어떻게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 서술되고 기억되고 있는지를 밝힌다. 특히 특정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국가사회 속에서 담론과 제도로 구조화되면서 사회 변화와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막는 현상을 역사적 접근법을 이용해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한국은 반일감정으로 표현되는 탈식민화(decolonialization)의 논의가 국가정체성 형성의 주요 요소가 되어 있지만(『중앙문화』 2016/06/12), 일본은 미군정이라는 식민의 경험을 넘어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시간성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은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전체적으로 시간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적, 양적 방법론을 활용해 과거의 과잉이라는 논지를 부각시키고, 관련 사료와 자료를 통해 주류 담론이 가진 문제점을 밝힌 후, 국가정체성의 형성에서 미래설계의 ‘부족’ 현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 Ⅲ. 장기지속(longue durée)과 반일감정

전술한 것처럼 본고의 시간성에 대한 연구는 동아시아 질서와 공동체 연구의 일환이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미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눈을 먼저 돌릴 수밖에 없다. 사르트르(Sartre 1956,

179)의 말처럼 존재하지 않지만 흐름의 형태로 인식되는 현재를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현재의 부족(lack)을 채울 수 있는 미래라는 새로운 시공간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성의 연구를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주류 담론의 패권성에서 벗어나려면 시간 속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실과 가능성을 재발굴하고 사회나 국가의 주류 이념과는 다른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현재라는 찰나(刹那)가 과거의 지속이냐, 아니면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냐의 갈림길인 것이다.

이상의 시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종합적으로 ‘과거의 과잉’이라는 본고의 논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고는 반일감정의 장기지속의 원인과 구조를 밝히면서 구조와 행위자의 시간성, 즉 시간적 한계성에 초점을 맞춘다. 반일감정이 한국인의 정체성에 하나의 기초를 형성했지만, 이러한 인식구조는 행위자가 자신의 과거사의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포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류 담론의 장기지속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프랑수아 아날 학파의 논의를 참조한다. 아날 학파는 ‘문명’,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역사 서술 방법을 옹호했는데, 특히 페르낭 브로델(Braudel 1980)과 조반니 아리기(2008)는 자본주의의 역사 연구로 유명하다. 브로델(1980, 27)은 역사적 시간대를 ‘단기지속(courte durée)’, ‘중기지속(conjuncture)’, 그리고 ‘장기지속(long durée)’으로 나누었다.

단기지속은 어떤 사건을 둘러싼 짧은 시간대의 역사이고, 중기지속은 몇십 년 단위로 가격이나 경제 상황의 변천을 추적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장기지속은 때로 단절도 포함되지만 “변형과 복귀, 쇠퇴와 정비, 정제” 등을 동반하는 반복적인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구조화(structuration), 탈구조화(destructuration), 재구조화(restructuration)와 연결된 개념이다(브로델 1997, 854). 브로델이 장기지속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본 이유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조를 파악하고 그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었다.

브로델(1997, 865)은 수백 년에 걸친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3세기경에 시작되어서 19세기에 전성기를 맞은 자본주의는 18세

기를 향유했던 무위도식하는 귀족의 특권을 약화시키면서 기업가는 그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했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의 전환이 자유무역 혹은 자유방임의 추구라는 담론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자본주의는 20세기 초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전문가들의 의심의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 언론, 경제학 교육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브로델(1997, 864)은 사르트르를 언급하면서 그가 “불평등이 사라진 사회, 그리하여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지배가 없는 사회를 꿈꾸었다”고 갈파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사회적 특권은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990년대 부상한 이후 주기적(cyclical)인 부침을 보이는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는 중기지속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요인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장기지속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자본주의의 역사처럼 적어도 몇백 년의 시간을 포괄하면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브로델(Braudel 1980, 31)에 따르면 장기지속은 구조의 형성을 통하여 인간집단이 특정한 지리적, 생물적, 생산적, 정신적 구조에서 탈피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에서는 반일감정의 장기 지속적 역사성에 대해 길게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 적어도 임진왜란(1592-98)과 일제강점기(1910-45)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을 필두로 인접국으로 겪어온 갈등의 역사는 반일감정의 근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의 통신사를 에도막부에 파견하면서 약 250년간의 평화관계를 유지했지만, 통신사의 임무중의 하나가 잡혀간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조선 포로의 송환인 것을 볼 때 반일감정은 평화의 시기에도 지속성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정출현 2013). 사실 임진왜란이라는 참화의 기억이 일본은 ‘원수’라는 인식을 조선인의 정서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만들었다(이규배 2008).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경험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 IV. 과거의 과잉

앞에서 서술한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반일감정을 지속시키는 인식과 담론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주류 담론과는 다른 과거라는 시간 속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재조명될 때, 시간성에 대해 균형 잡힌 태도의 형성이 가능하고 결국 국가정체성도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과잉’이라는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할 예정이지만, 이에 앞서 한중일관계에서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은 최근 10여 년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해 본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 제공하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연구의 일종인 코퍼스 분석을 통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이상 가나다순)에 2000년부터 2013년(14년)에 걸친 모든 기사에서 위안부, 독도, 영토, 야스쿠니, 센카쿠라는 다섯 개의 대상어를 검색해 보았더니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최재웅·이도길 2014).<sup>1)</sup>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2013년으로 갈수록 이 다섯 개의 대상어가 많이 검색되는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문기사에서 이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어의 단순 사용빈도의 조사보다는 대상어와 같은 문맥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를 의미하는 공기어를 분석함으로써 특정단어가 많은 경우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다. <표 2>는 공기어 분석을 한 것인데, 대상어로 일본, 중국, 동북아를 검색했다.

이 데이터에서 보면 신문기사에서 ‘일본’이라는 대상어와 같은 문맥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1위에서 7위까지의 단어들(한국, 중국, 미국, 도쿄, 정부, 총리, 일)을 빼면, 독도(8), 역사(10), 위안부(13), 교과서(14) 등으로 영토 혹은 과거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연관

1) Trends21 코퍼스는 대규모의 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언어, 사회, 문화적 변화 추이를 밝히고자 시작된 ‘물결 21’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이상 가나다순)의 기사를 수집/가공한 언어 자원이다. 현재 코퍼스의 규모는 2000년부터 2013년(14년치)에 이르는 모든 기사를 포함하여 총 6억 어절에 이른다.

되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지명이나 국명을 빼면 경제(6), 시장(13) 등으로 주로 경제와 관련되어 많이 보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북아와 함께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1), 협력(4), 경제(5) 등으로 평화와 협력의 맥락 속에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즉 동북아라는 지역적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안보(8)나 북한(11)과 같이 위협과 연관된 경우도 일부 있으나, 상당 부분 평화와 경제적 협력을 의미하는 문맥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표 1>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어 검색

| 연도<br>대상어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위안부       | 1,012 | 1,410 | 532   | 571  | 1,073 | 1,067 | 638   | 2,811 | 424   | 347   | 728   | 1,147 | 2,773 | 3,404 |
| 독도        | 1,725 | 1,131 | 1,164 | 608  | 2,268 | 1,038 | 4,698 | 1,575 | 8,969 | 2,582 | 3,111 | 5,173 | 8,062 | 4,111 |
| 영토        | 1,037 | 966   | 790   | 814  | 1,711 | 2,221 | 1,643 | 1,581 | 2,230 | 1,246 | 2,169 | 2,176 | 3,898 | 2,732 |
| 야스쿠니      | 121   | 1,486 | 293   | 221  | 780   | 1,964 | 1,956 | 442   | 317   | 309   | 176   | 171   | 301   | 1,514 |
| 샌키쿠       | 4     | 1     | 5     | 41   | 90    | 156   | 43    | 15    | 52    | 4     | 684   | 221   | 2,085 | 1,232 |

<표 2> 빅데이터를 통한 공기어 검색

| 공기어<br>순위<br>대상어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일본               | 한국 | 중국  | 미국 | 도쿄 | 정부  | 총리 | 일  | 독도  | 아시아 | 역사 | 보도 | 한   | 위안부 | 교과서 | 대만 |
| 중국               | 일본 | 한국  | 미국 | 북한 | 바이징 | 경제 | 대만 | 러시아 | 정부  | 세계 | 방문 | 상하이 | 시장  | 홍콩  | 인도 |
| 동북아              | 평화 | 한반도 | 중국 | 협력 | 경제  | 지역 | 중심 | 안보  | 일본  | 한  | 북한 | 한국  | 미   | 허브  | 물류 |

이 빅데이터 분석에서 반일감정으로 대표되는 과거의 과잉 현상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망해 보면 이러한 현상이 늘 있어 왔던 것은 아니다. 사실 위안부 문제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성장 및 여성운동의 조직화와 함께 발생되었다.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가 1980년대 후반부터 피해 여성을 발굴한 것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운동의 단초가 되었고,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1990년 5월 한국교회여성협의회가 처음으로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정현백 2003, 160). 일본 정부가 위안부는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라고 해명하자, 한국의 37개 여성단체가 공개서한을 보냈고, 1990년 11월 16일 정대협이 창립되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임을 공개적으로 증언했고, 1992년 1월 8일에 첫 수요시위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4, 15).

과거의 과잉은 실제로 냉전과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비정상적 은폐 이후에 등장한 현상이다(정현백 2003, 189). 냉전이라는 현존하는 위협 속에서 행위자들은 과거를 반추하거나 미래를 꿈꾸기는 힘들었고 생존을 위한 현재에 집중해야 했다. 냉전의 질곡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멈췄고, 그 시대를 산 인간들은 냉전이라는 공간의 포로가 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은 앞으로도 더 밝혀져야 되고 적절한 법적, 금전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외교 이슈화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성학자들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위안부의 동원에 상당한 역할을 했던 같은 민족의 조력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50년간 이 문제를 침묵하게 만들었던 가부장적 한국 사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정현백 2013, 189).

냉전의 종식 이후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한일 정부 간에는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 종전 50주년을 맞아 침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1995),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1998년 서명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 등이 있다.<sup>2)</sup>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우익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부 간 노력의 정신에 위배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도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대의에 대해서는 정부 간 공감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시민사회는 일본의 문화를 포용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과거사와 영토분쟁으로 대표되는 과거청산 운동이 주류를 이루면서 반일감정의 온상이 되어 왔다. 세계화와 지역화

2) 국가기록원, “한일파트너십 선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25>. (2017년 3월 28일 검색)

(regionalization)라는 전지구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두 갈래의 흐름이 21세기에 들어 조화되면서 반일 감정이 어느 정도 약화되었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서 재무장을 추진하는 보수적 정치인들이 일본에서 집권하고,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반일정체성이 한국에서 부각되면서 한일관계의 시간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V. 반일 정체성과 위안부 문제

한일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외교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위안부, 강제 징용, 야스쿠니 참배, 역사교과서, 독도 문제 등 한일관계는 미해결된 과거의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다. 물론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부적절한 역사관과 반성하는 자세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문제는 쌍방향적 관계에서 기인하듯이 일본 한 쪽만을 탓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에 있는 한국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의 획기적인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근본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한국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필요를 느끼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이나 전략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장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반일 정체성의 구조를 파악한다.

중군위안부에 관해 많은 연구 자료가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일본의 태도를 담고 있다는 고노 담화의 기초가 되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조사 자료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2011, 687-691). 일본 내각관방내각외정심의실(內閣官房內閣外政審議室)은 1991년 1월 2일부터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그리고 미국국립공문서관 등을 상대로 위안부 관련 조사를 실시해, 전 중군위안부, 전 군인, 전 조선총독부 관계자, 전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역사 연구가 등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그 결과를 “조선반도 출신의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라는 이름으로 1992년 7월 6일 발표했다.<sup>3)</sup>

외정심의실은 1932년 상하이사변이 발발했을 때를 전후해 중국 현지에 위안소를 처음 설치했다는 자료가 있으며, 그 규모와 범위는 전쟁의 확대와 함께 확산되었다고 보았다. 확인된 설치 장소는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뉴기니, 홍콩, 마카오 등이었다. 위안소의 설치에 일본군 당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설치 이유는 점령지 내에서 일본 군인들이 주민들을 강간함으로써 반일감정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성병 방지와 방첩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외정심의실은 위안부의 총수는 자료 부족으로 명시하기 힘들지만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위안부들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 한반도,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였고 일본인을 제외하고 한반도 출신이 가장 많았다. 위안소의 대부분은 민간업자에 의해 경영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또 위안소 규정을 작성하는 등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관리에 직접 관여했고, 특히 위생관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어 폐임도구 사용을 의무화하고 군의관이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 등을 실시했다. 외정심의실은 일본군이 위안부의 외출 시간과 장소를 한정하는 등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자유가 없는, 고통스런 생활을 강요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에 대해서도 외정심의실은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위안소 경영자의 의뢰에 따라 알선업자들이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인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업자들이 감언으로 유혹하거나 위협을 통해 당사자의 의향을 무시하며 모집한 사례가 많았고, 더구나 관헌 등이 직접 가담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정심의실은 도항 허가나 신분증명서 발급 등 위안부 운송에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고 밝혔다. 위안부가 군 선박과 차량에 의해 전쟁터로 이송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위안부의 수송

3) 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 “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조선반도 출신의 이른바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file/file\\_1.pdf](http://wam-peace.org/ianfu-koubunsho/file/file_1.pdf). (2011년 1월 23일 검색)

에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군속에 준해 도항 허가를 했고 일본 정부가 신분증명서를 발급했다.

위안부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검토하면 피폐한 식민지의 많은 여성들이 생계 수단을 찾다가 일본군이 지정한 위안소 관리인이나 그들과 연계된 중계업자들에게 속아 위안부가 되었던 경우가 많아서 위의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2011, 34-42). 미국전시정보국심리작전반의 “일본인포로심문보고 제49호”와 “연합국최고사령부연합번역통역국조사보고, 『일본군 위안시설』 제2절위안시설9위안소 b버마(1)” 등의 사료들을 종합해 보면 민간인 업자들이 일본군의 의뢰에 따라 매춘부를 포함해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평균 25세가량의 여성들을 속여서 동원한 기록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안병직 2013, 408).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위안부의 동원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 ‘관여’했다고 여러 번 발표했고, 1996년 위안부 문제를 다룬 첫 유엔 보고서를 작성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1996)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의 제도화에 관여한 범행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대협과 정신대연구소가 함께 채록한 피해자의 증언집에는 “증언의 법적 증거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은 2백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로부터 강제동원의 유형과 동원자의 국적과 직업, 피해자 나이, 동원되어 간 곳 등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한국의 피해자들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거의 유사한 피해 형태를 발견하기도” 했다(『중앙문화』 2016/06/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위안부의 동원에 있어서 비록 구조적 강제성은 인정되나 ‘강제동원’이나 ‘강제연행’이라는 주류 담론을 고수하는 것은 위안부와 같이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포괄적이며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측면이나, 일본과의 협상을 전략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 이 문제가 일본의 국가조직이 주도적으로 여러 사회조직을 움직여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강제동원’이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에 천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부분적 사실만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흔히 한국 사회의 기지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관할 혹은 묵인을 통해 존재해 왔던 것처럼, 조선의 여성들이 ‘성노예’가 된 데에는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실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박유하(2013)의 『제국의 위안부』에도 등장한다. 박유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016년 1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검찰이 기소한 이 책 35곳의 표현 중 2곳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위안부’ 집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고소인들이 바로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한겨레』 2016/01/25). 사실 재판부의 다음 판결문이 더 의미심장하다. 재판부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보면 주요 저술 동기가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책이 한국 사회의 주류적 시각과 다르지만 학술적 성격을 가진 대중서로서 재판보다는 학문과 사회의 장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사실 박유하(2013, 6)도 위안부에 관한 다양한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일본에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의 주장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일본에 존재하는 지한파들을 식상하게 만들어 한국에 대한 호의를 거두게 한다는 논지다. 박유하(2013, 9)는 위안부 문제를 지금의 한국에도 남아 있는 미군 기지촌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위안부가 일본군 고유의 범죄 행위가 아님을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위안부 문제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켰다는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박유하(2013, 25-26)는 수많은 위안부 모집 사례를 언급하면서 영화 『귀향』(2016)에서 나오는 것처럼 10대의 어린 소녀가 일본군대에 의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주로 한국인 업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한 경우가 많았고 정신대와는 달리

군대를 통한 강제동원이나 업자를 통한 납치는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다며 일본군의 자료를 근거로 주장한다. 물론 업자들이 빈곤과 차별에 시달리는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일자리와 자립을 빌미로 속여서 모집한 후 위안소로 넘긴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모면할 수는 없다. 박유하(2013)의 책에서도 일본군의 전쟁 수행의 일환으로 위안부가 모집되었고, 일본군의 수송선에 의해 동아시아의 여러 위안소로 보내졌음을 적시하고 있다. 결국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일본군에 의한 조직적인 동원과 인권유린이라는 전쟁 범죄임과 동시에 당시의 식민지 사회구조 속에서 위안부의 동원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조선인들과 그들의 인신매매조직,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빈곤과 차별에 견디지 못해 탈출을 결심하게 했던 가부장적 가족구조 혹은 심지어 그들을 팔아넘긴 친지들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위안부의 모집 과정을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비록 강제동원의 성격이 내포된 부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일본이 지속적으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게 해서 사실을 호도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 실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일본군이 현지 여성을 강제로 납치한 경우가 있었지만,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업자들을 통한 간접 동원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에 보다 가깝다.

이런 점에서 일본 당국의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지만, 망국의 길로 치달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조선의 지배층,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식민지 주민들이었던 가난과 차별에 직면한 젊은 여성들을 외지로 내몰았던 사회구조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이나 아니냐의 프레임에 묶인 위안부 논의는 시대적 맥락과 역사적 사실성이라는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오히려 위안부 논의는 강제동원이라는 프레임보다는 일본군의 구조적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앙일보』 2016/02/21).

그럼 일본이 2015년 12월 28일자 한일합의에 맞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하고 일본 정부 예산에서 10억 엔을 피해지원재단 설립에 출연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한일외교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한겨레』 2015/12/28). 또한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강제했다는 것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 측도 당시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그들에게 사죄하고, 금전적 지원도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 측의 사죄와 반성이 피해자와 정대협을 포함한 시민단체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7년 1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가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설립추진모임, 정대협 대표들은 다양한 비판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협상 주최인 피해자 배제, 외무상이 아베 총리의 사과문 대독, 일본의 국가 범죄(state crime)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명시한 점 등을 들어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미디어 일다』 2016/01/07). 결국, 한일수교 50주년이라는 데드라인에 쫓긴 합의는 외교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리하면 반일 성향의 시민단체들, 그들에 동조하는 언론과 학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무기력한 정부 등이 한국의 반일정체성의 견고성에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반일감정의 견고성은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감정적 수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군사적 부상을 두려워하는 현실주의적 판단의 결과이기도 하다(Yoon 2011).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한국 정부가 한일 간의 외교협상과 병행해서 피해 당사자 및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일 정부 간 협상은 피해자 단체가 “여론을 통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합의로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조윤수 2014, 71).

## VI. 결론

342년간의 백인 통치를 종식하고 처음으로 흑인정권을 탄생시킨 넬슨 만델라(Mandela) 대통령은 가해자였던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공존의 정치를 폈다. 그가 화해를 위해 내세운 말은 “우리는 잊지는 않지만 용서해야 한다(We should forgive but not forget)”였다(*Guardian* 1999/07/03). 한국은 일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일본은 위안부를 포함한 여러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사과하고 보상을 해 왔지만 한국의 국민정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물론 일본 내부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세력도 있지만, 아베 정권을 포함한 일본의 주류는 과거사의 해결보다는 ‘보통국가’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은 국제구조적으로나 국내정치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진향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도 한국이나 미국의 압력에 밀려 주기적으로 사과하고 일부 금전적 보상을 하는 상황을 연출해 왔지만 오히려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한국의 시민사회를 자극해서 반일정서를 키우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의 국가정체성과 대일관계에서 보이는 ‘과거의 과잉’이라는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면서, 이 현상을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본고는 탈식민화와 페미니즘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보는 시각에 동조한다(『중앙문화』 2016/06/12). 하지만, 본고는 반일감정이 장기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국제관계의 시간성과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미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의 장기지속에 대한 성찰적 지혜를 얻기 위해 프랑스 아날 학파의 논의를 참고했다. 아날 학파의 논의를 넘어 본고는 과거 편향적이거나 과거에 바탕을 둔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전개라는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타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시공간을 열어줄 정체성의 전환이 필요함을 밝혔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발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먼저 국가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주류 담론의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본고는 국제관계의 시간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하면서 과거의 과잉으로 대표되는 ‘기억의 정치’를 어떻게 선순환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간성은 아직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연구된 분야는 아니지만, 국제관계의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 유용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다. 시간성에 대한 고찰은 지속성과 경직성이라는 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한 자본주의나 한국의 반일감정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 더 민감도가 높은 국제정치학 이론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유은 (2004). “동북아 안보공동체를 위한 시론(試論): 구성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4집. 4호, pp. 69-91.
- 박유하 (2013). 『제국의 위안부』. 뿌리와 이파리.
- 브로델 페르낭 (1997).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2: 세계의 시간』. 주경철 역. 까치글방.
- 아리기 조반니 (2008). 『장기 20세기: 화폐 권력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원』. 백승욱 역. 그린비.
- 안병직 (2013).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 이규배 (2008). “임진왜란의 기억과 조선시대의 일본인식: 반일감정의 단초를 찾아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이신화 (2006). “동북아안보공동체 구축에 관한 소고.” 『전략연구』 제13권. 1호, pp. 7-40.
-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2011). 『일본의 군‘위안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현백 (2003).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 정출현 (2013). “임진왜란과 전쟁포로, 굴절된 기억과 서사적 재구.” 『민족문화』. 41권, pp. 14-27.
- 조윤수 (20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한일관계: 1990년대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6권. 1호, pp. 69-96.
- 최재웅·이도길 (2014). “물결21 코퍼스: 공개 웹 자원 및 활용 도구.” 『민족문화연구』. 64호, pp. 3-2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
- Agathangelou, Anna M. and Kyle D. Killian (2016). *Time, Temporality and Viol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fatalizing the Present, Forging Radical Alternatives*. New York: Routledge.
- Ashley, Richard and R. B. J. Walker (1990). “Speaking the Language of Exile: Dissidence in International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4, No. 4, pp. 259-268.
- Brewer, William (1986). “What Is Autobiographical Memory?” David Rubin (ed.). *Autobiographical Mem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5-49.

- Braudel, Fernand (1980). *On History*.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 Campbell, David (2002). "Time is Broken: The Return of the Past in the Response to September 11." *Theory and Event*. Vol. 5. No. 4, pp. 1-11.
- Checkel, Jeffrey T. (1998).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Vol. 50, No. 2, pp. 324-348.
- Connerton, Paul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lsgaard, Steffen (2013). "The Time of the State and the Temporality of the Gavman in Manus Province, Papua New Guinea." *Social Analysis*. Vol. 57. No. 1, pp. 34-49.
- Doty, Roxanne Lynn (1996). *Imperial Encounter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North-South Rel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Edkins, Jenny (2003). *Trauma and the Memory of Politic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pstein, Charlotte (2008). *The Power of Wor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Birth of an Anti-Whaling Discourse*. Cambridge, MA: MIT Press.
- Hansen, Lene (2006). *Security as Practice: Discourse Analysis and the Bosnian War*. Routledge: London.
- Hassan, Robert (2010). "Globalisation and the 'Temporal Turn': Recent Trends and Issues in Time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 25. No. 2, pp. 83-102.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977). *Hegel's Phenomenology of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rsch, Herbert (1995).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Studying Death to Preserve Life*. Chapel Hill, NC: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Hom, Andrew (2010). "Hegemonic Metronome: The Ascendancy of Western Standard Tim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6. No. 4, pp. 1145-1170.
- Hom, Andrew, Christopher McIntosh, Alasdair McKay and Liam Stockdale (2016). *Time, Temporality and Global Politics*. Bristol: E-International Relations Publishing.
- Hutchings, Kimberly (2008). *Time and World Politics: Thinking the Prese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Kowert, Paul (1998/9).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Security Studies*. Vol. 8. No. 2/3, pp. 1-34.
- Kratochwil, Friedrich (2006). "History, Action and Identity: Revisiting the 'Second' Great Debate and Assessing its Importance for Soci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2. No. 1, pp. 5-29.
- Lévinas, Emmanuel (1969). *Totality and Infinity: An Essay on Exteriority*.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Milgram, Stanle (1974). *Obedience to Authority: An Experimental View*. New York: Harper.
- Nishimura, Kuniyuki (2011). "Worlds of our remembering: The agent - structure problem as the search for identity."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46. No. 1, pp. 96-112.
- Ricoeur, Paul (2005). *The Course of Recognition*. Translated by David Pellau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uch, Leo (1983). *Hegel and the Human Spirit*.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 Said, Edward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Knopf.
- Sartre, Jean-Paul (1956). *Being and Nothingnes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 Shapiro, Michael (2001). *For Moral Ambiguity: National Culture and the Politics of the Family*.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State as Person in International Theor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0, pp. 289-316.
- Yoon, Tae-Ryong (2011). "Historical Animosit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Role of Morality and Realism in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9. No. 1, pp. 1-37.
- Zhefuss, Maja (2001). "Constructivism and Identity: A Dangerous Liaison."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7. No. 3, pp. 315-348.
- 安倍晋三 (2006). 『美しい國へ』. 東京: 文春新書.

## 2. 기타

UN 경제사회위원회 인권위원회 여성폭력 문제 특별보고관 (1996).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및 일본 조사 보고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in wartime).”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운동.” 『중앙문화』. 2016년 6월 12일.

호사카 유지. “위안부, 구 일본군의 구조적 범죄.” 『중앙일보』. 2016년 2월 21일.

“유엔 위원회 ‘한일 위안부 합의 부족’…사실상 재협상 권고.” 『연합뉴스』. 2017년 5월 12일.

“1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방청석 할머니 거센 반발.” 『한겨레』. 2016년 1월 25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 ‘군 관여 여성에 상처.’” 『한겨레』.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6가지 문제점.” 『미디어 일다』. 2016년 1월 7일.

Mandela, Nelson. “We Should Forgive But Not Forget.” *Guardian*. July 3, 1999.

국가기록원. “한일파트너십 선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25>. (2017년 3월 28일 검색)

內閣官房內閣外政審議室. “朝鮮半島出身の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 [http://wam-peace.org/ianfu-koubunsho/file/file\\_1.pdf](http://wam-peace.org/ianfu-koubunsho/file/file_1.pdf). (2017년 1월 2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05월 21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5월 31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6월 2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2 (2017)

**The Excess of the Memorable Past:  
The Tempor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Longue  
Durée of Korea's Anti-Japanese Identity and the  
Questions of 'Comfort Women'**

**Key-young Son**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plores the temporal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 field that has received much less attention than its spatiality. It will discuss how to utilize the temporal approaches towards international relations, drawing on the philosophical and historical literature and the recent tre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As a way of shedding light on this discussion, this article analyzes Korea's anti-Japanese sentiment instigating the indiscriminate antipathy and conflicts vis-a-vis Japan as a result of its structuration as an inalienable part of Korea's national identity. By analyzing Korea's anti-Japanese sentiment stemming from the 'comfort women' and many other issues from the temporal, philosophical and quantitative perspectives, it will illustrate the structure of reproducing and reinforcing the sentiment and analyze Korea's national identity exhibiting the 'excess of the past.' To illustrate the temporal identity of a nation state, it will offer an extensive review of various concepts and theories, including the 'longue durée' of Fernand Braudel, a member of the Annales School, and highlight the necessity of harmonizing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68 아태연구 제24권 제2호 (2017)

- Key words: Temporality, International Relations, Anti-Japanese Sentiment, National Identity, Comfort Women